

# 신산업 우선허용 체제로의 전환

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:

2020년 5월 15일 혁신경제연구회

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길 홍 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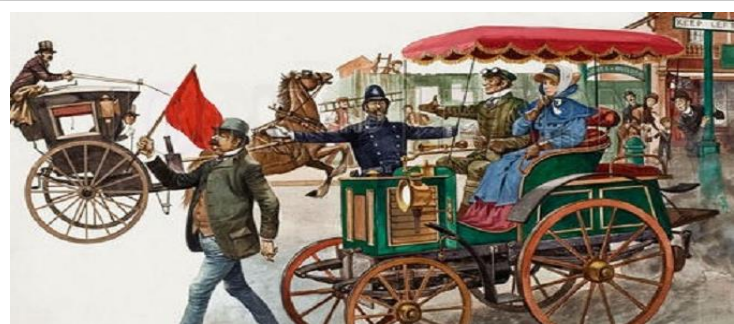
## 목 차

- ① 왜 신산업 규제혁신인가?
- ②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
  1.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
  2. 현장제기 규제혁파
  3. 미래지향적 규제지도
- ③ 지난 2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



# I .. 들어가며

## 영국 붉은 깃발법 (Red Flag Act, 1865년)



신산업(자동차) 대두

↓

마차업자 반발

↓

규제 신설(속도제한, 적기 뒤따르기)

↓

자동차산업 주도권 상실

## 독일의 아우토반 (Autobahn, 1933년)



영국보다 자동차산업 뒤처짐

↓

아우토반 신설

↓

규제 완화(속도 무제한, 통행료 무료)

↓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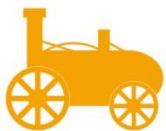
자동차산업 주도권 획득

##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

- 2016년 다보스 포럼  
4차 산업혁명 이해 의제로 제시



- 시대별 산업혁명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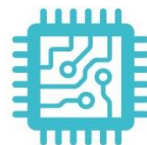
**1차 산업혁명**  
1760~1840년

증기기관 기반  
기계화 혁명



**2차 산업혁명**  
19~20세기 초

전기 에너지 기반  
대량생산 혁명



**3차 산업혁명**  
20세기 후반

컴퓨터.인터넷 기반  
지식정보혁명



**4차 산업혁명**  
현재

AI, IoT,  
빅데이터 기반  
초지능 디지털혁명



## 4차 산업혁명의 개념

- 新 ICT 기반기술을 통해 디지털, 물리, 바이오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으로  
경제 · 산업 · 사회 구조의 파괴적 변화  
(WEF, 2016년)
-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 감소하고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 
생겨날 것이라고 전망  
(WEF 미래고용보고서, 2016년)
- 2023년에는 의사, 변호사, 중개인, 교수 등 전문직 업무 1/3을 스마트기계가 대체할 것이고,  
2030년에는 현재 일자리 90%를 스마트기계가 대체  
(가트너, 2016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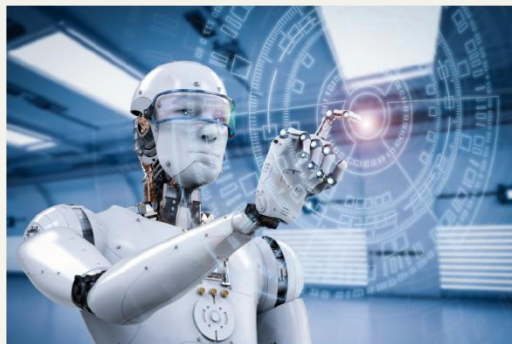
- 사람, 사물, 공간을 초연결, 초지능화하는 만물 초지능혁명
- AI와 ICBM(IoT+Cloud+Big Data+Mobile) 결합하여 인간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지능정보사회

➡ **혁신기술은 기존 규제 초월 : 기존 규제와 갈등 불가피**

# 1 4차 산업혁명



ICT 기반 기술융합



기하급수적 기술진보 속도



승자 독식

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정책의 핵심

➔ 유연한 규제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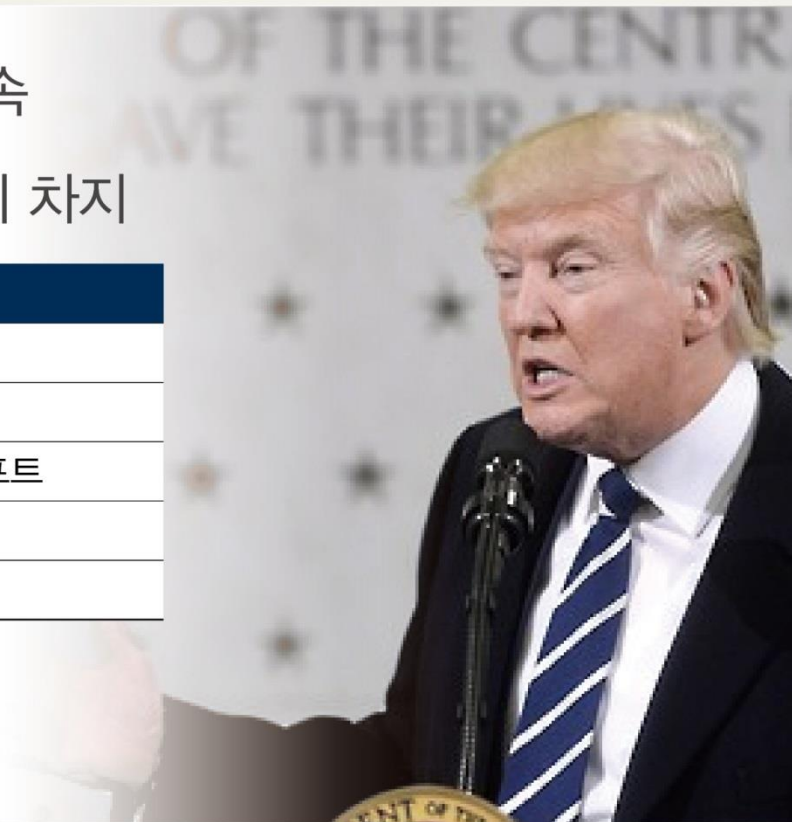


## | 미국 : 바짝 고삐 쥐는 트럼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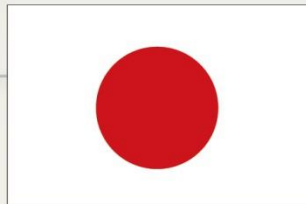
- 트럼프 대통령 **기업 규제 75% 제거** 약속
- 글로벌 시가총액 5위**까지 미국 IT기업이 차지

2007년		2017년	
1위	페트로차이나	1위	애플
2위	엑손모빌	2위	알파벳(구글)
3위	GE	3위	마이크로소프트
4위	차이나모바일	4위	아마존
5위	중국공상은행	5위	페이스북

\* 출처 : 메리 미커(2017년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)







## | 일본 : 국가전략적으로 올인하는 아베

- 아베 정부 핵심정책(3가지 화살)  
①금융정책 ②재정정책 ③**성장전략** (규제완화와 구조개혁)
- 총리 산하 컨트롤 타워 **미래투자회의** 설치 (2015년 9월)
- 7대 전략이 포함된 **신산업 구조비전** 발표 (2016년 4월)
- **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** 추진 (2017년 3월 각의 의결)





## 중국 : 질주하는 중국

- 중국제조 2025 발표 (2015년 8월)
- 자유무역시범구 연차별 확대 (2016년, 11개 지역)
- 네거티브 규제 강조 (리커창 총리, 2016년 5월)
- 바이두, 알리바바, 텐센트 등 IT산업 발전



#### 국내 제조업 매출액 감소

• 제조업 매출액 추이 : (2013년) ↑ 1.2% → (2014년) ↓ 1.9% → (2015년) ↓ 4.2%

\* 출처 : 한국은행(2016년 5월)

#### 4차 산업혁명 준비 : 45개국 중 25위

\* 출처 : UBS(Union Bank of Switzerland, 2016년 1월)

#### 국내 제조업 4차 산업혁명 대응 : 선진국 4년 격차

\* 출처 : 산업연구원(2017년 5월)

#### 4차 산업혁명 준비 부족 : 중소기업 93.6%

\* 출처 : 중소기업중앙회(2016년 12월)

#### 4차 산업혁명 대응 미흡 사유 :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

•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(22.3%) > 전문인력 및 인재 부족(18.6%) > 4차 산업혁명 이해부족(18.4%) \* 출처 : 현대경제연구원(2017년 5월)



## 4 맥킨지의 한국진단

# 글로벌 혁신 경쟁과 한국 스타트업 환경

최근 1년간 투자 받은 스타트업 중  
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기업의 국적

업체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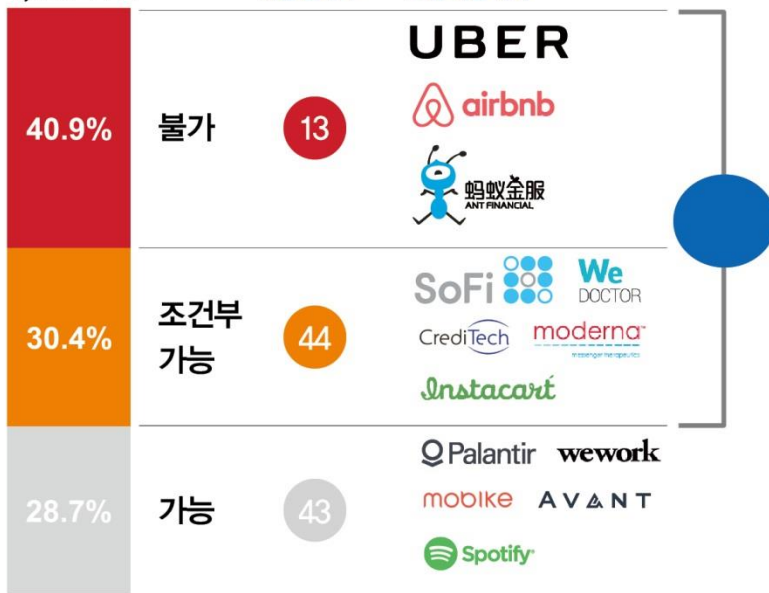


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기업의 사업 모델을 한국 시장  
적용 시 규제 저촉 가능성 분석

1,160억 달러

해당 업체 수

포함 기업 예시



누적 투자액

\* 자료: Pitchbook, 테크앤로 법률 검토 결과, 팀 분석

## 네거티브 규제검토 기구

### ● 신 산업 규제 혁신 위원회 (2016년 3월~)



- 원칙개선, 예외소명 ·국제적 규제 최소성 ·민간주도
- 500여건 발굴 ⇒ 500여건 개선방안 마련

##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

현장방문,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, 연구기관 등과 함께 과제 발굴·개선



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\* 중심으로 상시 검토·조정

\* 5대 분과, 전문가 120명

\* 출범 이후 200여차례의 현장간담회와 위원회회의를 통해 총 500여건의 핵심과제 발굴, 혁파 ('16년 총 271건 검토, 255건, '17~'19년 총 259건 검토, 240건 규제혁파

신산업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애로 발굴·혁파



무인이동체



ICT 융합



바이오헬스



에너지·신소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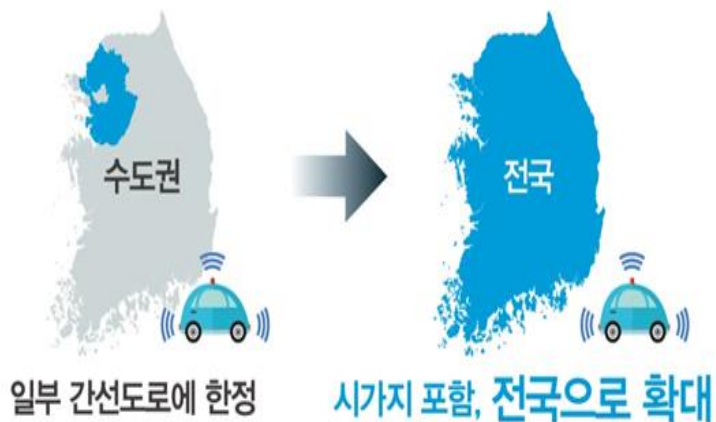
신서비스



## 주요 사례 : ① 개선 사례

**예시** 자율주행차 시험운행도로 / 드론 사업범위

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도로 네거티브 전환



드론의 사업범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






##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

### 그간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도

- ✓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두 허용하는 방식
- ✓ 기존의 요건 나열식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규제개선에 한계
  - 정부의 2차례 네거티브 전환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 저조



사후규제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규제 유연성 확보 필요



## 현장의 목소리

“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, 너무 힘들다.”

“새로운 산업 분야는 규제가 뭐가 있는지 불명확하다.”

“규제를 많이 없앴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다.”

“규제가 너무 많아서 생활이 불편하다.”

규제를 많이 없앴지만, 새로운 규제가 또 생겨서? 규제혁신은 열심히 했으나, 실제효과가 작은 것들 위주여서?

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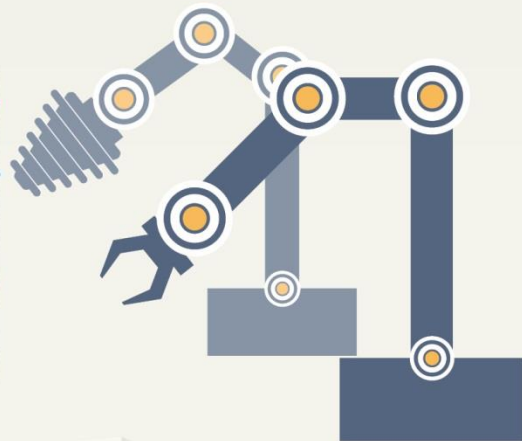
국민 대다수가 없애기를 원하나, 업계가 강력 반발해서? 위에서는 규제를 없앴으나, 지역 현장에서는 그대로여서?



## |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도의 함의

### ● 산업계 요구 : 사전허용 - 사후규제

“신산업 관련 사업을  
먼저 할 수 있도록 허용  
하고 문제가 생기면  
나중에 규제해 달라”



# 신산업 규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

## 신산업 우선허용



### 법·제도

우선허용-사후규제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 
입법방식 유연화 + 규제 샌드박스



### 현장 · 사례

신산업 현장 제기 규제애로 혁파



### 선제 조치

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

# 신산업 규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

01

##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

... 신제품·신서비스 시장출시 **우선 허용**, 필요시 **사후규제**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 전환 ...

입법 기술적으로  
포괄성, 유연성 보완



**입법**방식  
전환



**혁신제도**  
도입

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,  
신사업 시도/추진 지원



**포괄적 네거티브 규제**

**입법방식 유연화**

**규제 샌드박스**

포괄적  
개념 정의

유연한  
분류 체계

네거티브  
리스트

사후  
평가관리

임시허가

시범사업

규제  
신속확인

사후 규제

• 포괄적 네거티브 총 103건 발굴협파 1차 34건 ('18.1.22) / 2차 65건 ('18.10)

# 신산업우선허용체계 (입법방식 유연화)

## ① 포괄적 개념 정의

✓ 기존 법령에 요건·기준 등이 과도하게 한정적 기술, 신산업 수용 곤란  
→ **포괄적으로 개념 정의**

예시

전자화폐 정의 / 클라우드 펀딩

### 전자화폐 정의 비교



영국

전자화폐 개념을 포괄적으로 기술,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 수용 가능  
(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)

한국

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 
① 2개 이상 광역자치체 ② 500개 이상  
가맹점 ③ 구입 가능한 재화범위가 5개 이상,  
5개 업종 이상 등 열거(전자금융거래법)

→ 전자화폐 요건이 과도하고 세밀히 규정

### 새로운 금융상품 수용 불가



영국

클라우드펀딩 도입을 금융법상  
증권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 
통해 수용

한국

클라우드펀딩 도입에  
2년 소요(자본시장법 개정)



# 신산업우선허용 체계 (입법방식 유연화)

## ② 유연한 분류 체계

✓ **현재 제한** → 기술수준을 전제로 한 분류는 신제품·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 
**혁신카테고리 신설**, 분류체계 유연화

### 자동차 분류체계

#### EU

모터사이클을 L1~L6로 나누고,  
여기 속하지 않는 차량은 L7으로 분류

#### 한국

경형·소형·중형·대형 이륜자동차로만 분류

→ 새 유형 차(ex. 트위지)  
출현시 시장출시 애로



### 사례1 자동차 분류 체계 유연화 (국토부,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)

#### 현행

자동차 종류를 구조, 크기, 배기량 등에 따라 제한적 열거

#### 개선

**혁신카테고리 도입하여 차종 구분 유연화**

#### 효과

새로운 형태의 차종 신속한 수용 가능 → 기업 투자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촉진  
(예. 새로운 형태 전기자동차 시장출시 가능)



### 사례2 이식 가능한 장기 등 범위 확대 (복지부, 장기이식법)

#### 현행

이식 가능 장기·조직 13종 열거(신장, 간장, 췌장 등)

#### 개선

**윤리위 등에서 인정시 허용 가능토록 혁신카테고리 도입**

####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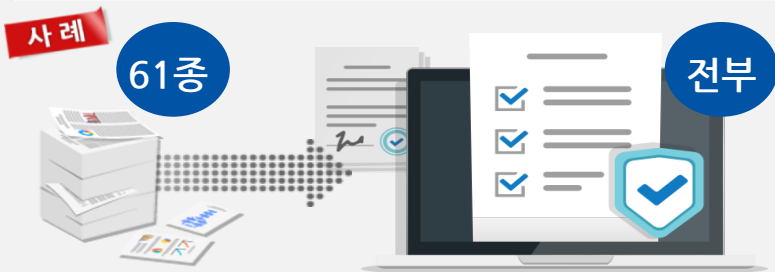
선진의료기술 탄력적 수용 가능, 새로운 장기이식 기술 촉진  
(예. 안면·족부 등도 이식 가능한 장기 등에 포함 가능)



# 신산업우선허용체계 (입법방식 유연화)

## 네거티브 리스트

금지사항만 열거, 비열거 사항은  
원칙적으로 허용



종이문서와 동일 효력인 전자문서 확대(61종 → 전부)

전자영수증 발급 등 전자문서 활성화

## 사후 평가 · 관리

사전심의 → 자율심의, 사후평가 방식 전환



음악영상물 자율심의 후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

신속한 유통 및 제작자 창의성 촉진

# 1. 신산업 규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

## 01 신산업우선허용 (규제샌드박스)



- ➔ 일정조건(시간, 장소, 규모) 하에 **기존규제의 일부 면제 · 유예**를 통해 신사업 시도가 가능토록 **테스트를 허용**하는 방식

\*영국에서 금융분야 최초 도입('16), 전세계 20개국 도입 (영국, 일본 등) 또는 추진중(미국 등)

## 규제혁신 5법



### 0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(국회 계류중)

- 신산업우선허용,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원칙 제시

### 02 분야별 혁신4법 국회통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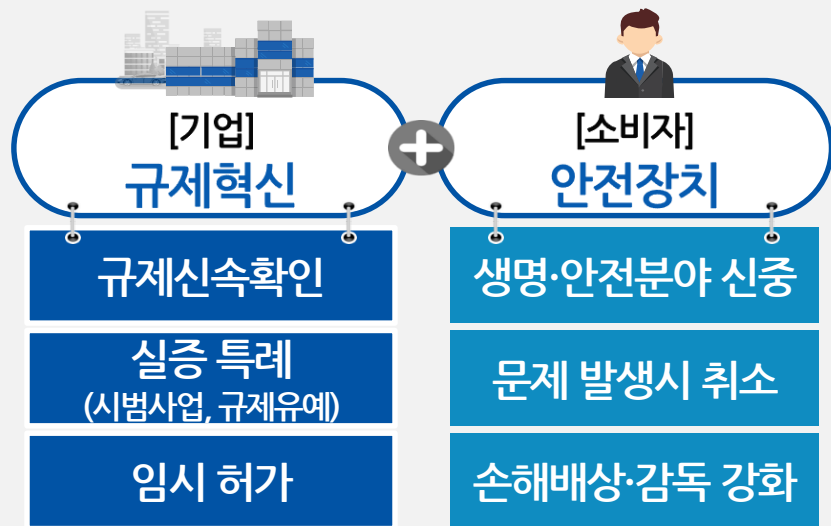
-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('19.1 시행)
-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('19.1 시행)
- 지역특구법 개정 ('19.4 시행)
-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(18.12.7)  
인터넷전문은행법 (18:9.20, 은산분리완화)  
**데이터3법** (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), 일부의원과 시민단체반대에 직면  
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토록 제도지원 시급

# 1. 신산업 규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

## 01 법·제도 (규제샌드박스)

### 혁신과 안전의 균형

#### 3+3종 세트



####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이 살아납니다

- 01 혁신의 장애물 제거 → 신속한 출시**
  - ▶ 핀테크 업체, 금융고객 정보 클라우드 활용
- 02 자유로운 테스트 환경 조성**
  - ▶ 드론 시범공역 허용, 무인선 일정해역 시험운행
- 03 규제 불확실성 해소**
  - ▶ 신산업 현장 제기과제 약1/3, 규제여부 몰라 제기(17)



### 지역특구법 전면 개정 ⇒ “지역 혁신성장의 가속화”

#### » 수도권 제외 지역, “규제자유특구” 신설 → 국가 균형발전 + 지역 혁신성장

- 업종 제한없이 혁신성장 관련 모든 분야 대상
- 특구내 사업자에게 기존 201개 규제 특례 적용
- 규제혁신 3종 세트(신속확인, 실증특례, 임시허가) 적용
- 특구내 혁신사업 육성위해 재정 · 세제 적극 지원



#### » 규제프리존법과 절충 → 「규제 혁신 + 공익적 가치 보호」 조화·균형

- 의료 · 안전 · 환경 등 민감영역 제외하고 대부분 특례 적극 반영
- 기존 27개 지역전략산업과의 연속성 보장
- ※ 시 · 도지사가 동일 전략산업재신청시 당연지정의제

#### »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·노력 전제 → 규제자유특구 성패를 좌우

- 기업들은 시 ·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제안
- 시 · 도지사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

# 1. 신산업 규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

01

## 우선허용체제 규제샌드박스

### • 적용가능한 사례 (예시)



#### 규제 신속확인

##### 자율주행 농기계

농지外 일반도로  
주행 가능여부 등 부처에 문의시  
신속 확인



#### 실증특례

##### 배달로봇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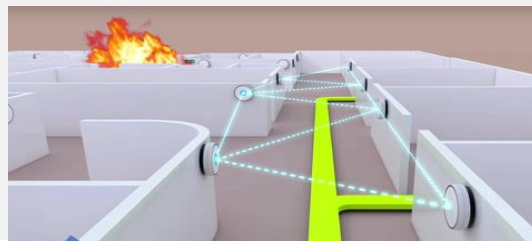
보행자전용도로 운행 금지 불구,  
일정 조건하에서 실외테스트 허용



#### 임시허가

##### 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

승인대상 소방용품이  
제한적으로 열거 →  
임시허가로 시장출시 허용



### 자율주행차 로드맵 시범구축

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을 “역산” 하여 단계별 규제정비 계획 수립



#### 1 발전단계 고려

미국 자동차공학회 6단계 기준



#### 2 시나리오 도출

3개 핵심변수 → 8단계 시나리오



#### 3 규제이슈 발굴

4대 영역, 30개 규제이슈

6단계

Lv.0 (무자율)

Lv.5 (완전자율)

3변수

사람 운전

시스템 운전

신호등 無

신호등 有

시범구간

전체도로

4영역

운전  
주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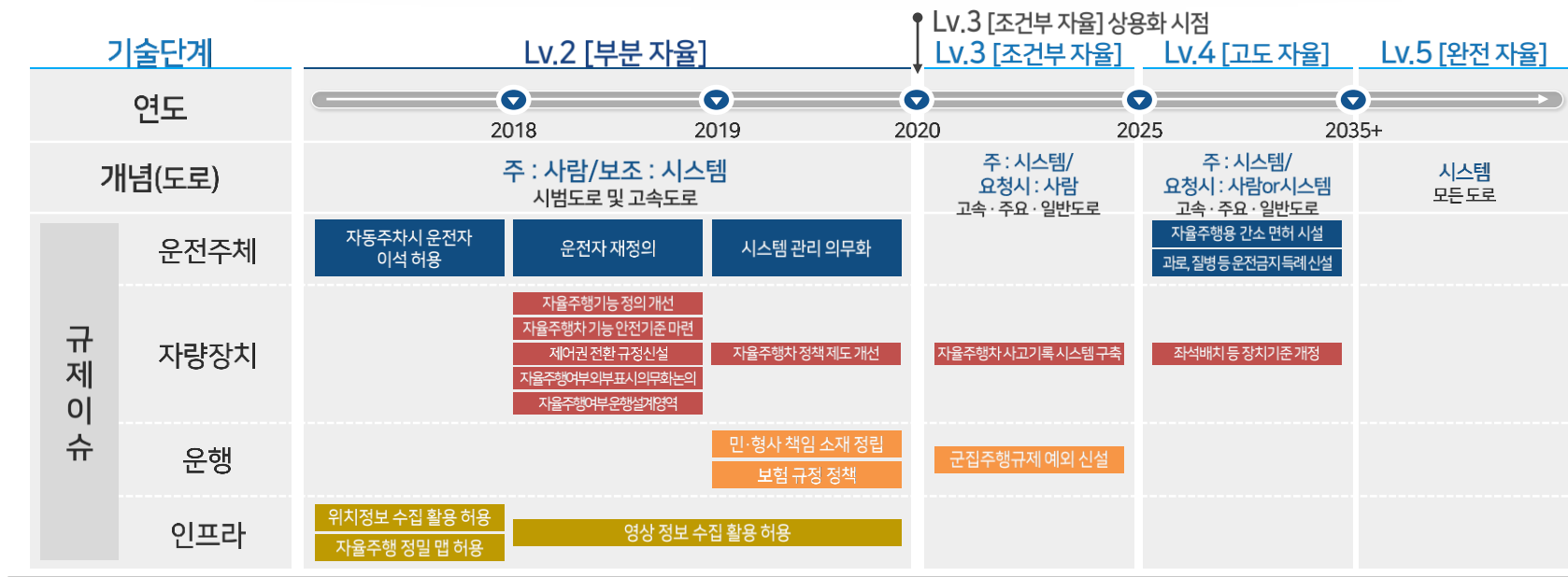
차량·  
장치

운행

인프라

관·산·연 총 22개 기관 합동작업 2018.11.9

### 자율주행차 로드맵 설계도





# 1. 입법방식 유연화, 그간의 성과

□ 금융, 바이오, 신소재, 스마트공장, 신의료기기,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산업분야에서 입법유연화 총 580여건 (2020. 5.7일 기준)

\* 허용대상 경직적 열거 및 필요시 법령 개정 →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 법령 개정 없이도 신제품·신기술 포섭

◇ 1차(18.1.22, 규제혁신대토론회) : △금융△바이오△자동차·선박 △ICT 분야 등 **38개**

\* ▲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, ▲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

◇ 2차(18.10.31, 국정현안조정회의) : △신소재△스마트공장△신의료기기분야 등 **65개**

\* ▲ 체외진단의료기기즉시변경허가대상네거티브화▲ 시설물점검시드론등신기술활용허용등

◇ 3차(19.4.18, 중앙부처) : △시장 △기업 △정부 영역 등 **132개**

\* ▲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상 산업네거티브화▲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방식 네거티브화 등

◇ 4차(19.9.19, 지자체) : △지역산업 △서민경제 △주민생활 영역 등 **142개**

\* ▲ 금융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 포함▲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대상 확대 등

◇ 5차(20.5.7, 공공기관) : △신산업 △기존산업 △주민생활 △포용사회 영역 등 **206개**

\* ▲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유연화, ▲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합리화 등

## 2. 규제샌드박스, 그간의 성과

- 전세계적으로 영국, 싱가포르, 미국, 호주, 일본, 대만 등 21개국에서 시행 중
- 자율주행,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산업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부여 총 227건 - 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(규제혁신 5법, '19. 1월/4월 시행)
  -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(2019.1.17일), 4.1일 금융분야, 4.17일 지역특구 분야에서 시행, 현재까지 총 227건('19년 195건, '20년 32건)을 승인
- 영국(연 40여건), 일본(현재 9건)에 비하면 양적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성과

< 부처별 승인(지정) 현황, '19. 12. 19. 기준 >

	금융위원회 (혁신금융)	산업통상자원부 (산업융합)	과학기술정보통신부 (ICT융합)	중소벤처기업부 (지역특구)	계
건수	102	39	47	39	227

주: 총리실 보도자료 참고

##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

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위해 **8대 선도사업 규제혁신**



## 2.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신

02

### 테마별 규제혁파

#### 시장진입·영업규제 혁신(18.10)

시장진입 장벽 해소, 사업자 활동  
제약 완화 등 40건 개선

**사례**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 
("과당경쟁 우려" 삭제)  
통신판매업(온라인 쇼핑물)  
신고제 폐지 등



#### 창업규제혁신(18.10)

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1인·소규모로  
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105건 개선

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

**사례**

업력(6개월)에 상관없이  
사회적기업 창업 허용 등



#### 영업·입지규제정비(18.4)

영업요건 완화, 영업 관련  
행정절차 간소화 등 38건 정비

**사례** 산단내 산업시설용지에  
신규업종 입주 허용  
시설경비업 인력기준 완화  
(20명 → 5명 이상)



####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파(17.12)

시장진입 장벽 해소, 사업자 활동  
제약 완화 등 40건 개선

국유 유휴부지 개발범위 확대  
(건축개발 → 토지개발도 포함)

**사례**

관광특구의 도시공원내 일반음식점  
설치기준 완화(10만㎡ → 5만㎡) 등





### 3. 민생불편·부담 야기 규제 혁신

#### 01 국민불편·기업부담 해소

☑️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사항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시 접수·해결 추진

중기옴부즈만,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통하는 창구  
→ 기업 불편·애로 상시 접수·해결

»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건의 250여건 개선

사례

- ✓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완화 (최저임금 110% 이상 → 최저임금 이상)
- ✓ 전기자동차 급속충전방식 통일

민관합동  
규제개선  
추진단

일반국민·소상공인 불편 접수·처리

»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,300여건 처리

• 소관부처 답변(14일내) → 필요시 소명요청(국조실) / 소명(부처) → 필요시 개선권고(규개위)

» 국민생활 및 자영업자 등 민생관련 건의과제 약 68% 차지

사례

- ✓ 농지 조성중인 간척지의 임시사용 용도 확대 (향토문화축제, 문화예술 공연·전시 가능)
- ✓ 공공기관 구내식당 불합리한 위탁 계약관행 개선

규제개혁  
신문고

온라인

### 3. 민생불편·부담 야기 규제 혁신

01

#### 국민불편·기업부담 해소

##### ✓ 행정조사 일제정비(\*17.12)

»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행정조사(608건)를 최초로 전수 실태점검 → 175건 정비

사 례

- ✓ 행정조사 주기 완화 및 불필요한 조사항목 감축
- ✓ 유사 행정조사 통합 실시

##### ✓ 온라인·전자문서 규제 정비(\*18.5)

»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서비스·영업 전반의 온라인·전자문서 규제 → 113건 개

사 례

- ✓ 정부예산·기금 관련 영수증 4,800여만건 종이문서 보관의무 폐지
- ✓ 온라인 사업장에는 오프라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설·입지규제 면제·완화 (의료기기, 중고차 관련업 등)

##### ✓ 정부 인증시험·검사기관 운영 개선(\*18.6)

» 정부 인증·시험·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 → 157건 개선

사 례

- ✓ 시험검사 처리기한 명시
- ✓ 시험검사 지연사유 사전 공지 등

### 3. 민생불편·부담 야기 규제 혁신

02

## 중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

- ☑ 동일한 규제라도 중소기업·소상공인은 규제부담을 더 크게 인식
  - ➔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 차등화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

- » 규제 신설·강화 시 소상공인·소기업에 대해 규제 전부 또는 일부 면제·유예

→ 행정규제기본법 개정·시행('18.10), 근거 마련

사례 소상공인 규제 차등화 매뉴얼 배포('18.10)

- ✓ 연면적 5천㎡ 미만 건축물
  - 녹색건축 인증제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
- ✓ 장기요양기관 예·결산 편성·제출의무 적용시기
  - '18.5 시행, 다만 정원 20인 미만 시설은 '19.5 시행

- »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마련 ('19.상반기)

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이해갈등, 가치갈등으로 인해  
해결이 지연되어온 **Big Issue**를 선정 · 혁파 (주로 대통령·총리 주재 회의)

## 핵심과제

개인정보와 빅데이터, 의료빅데이터 및 정밀재생의료  
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 
공유경제 (승차, 숙박 공유 등 플랫폼 비즈니스)



의료기기 규제혁신  
(<sup>18.7.19</sup>)

- 첨단의료기기 조기 시장진입 지원
- 체외진단분야 '先시장진입-後신의료기술평가'로 전환  
시장진입 기간 최대 390일 -80일 이내로 단축



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 
(<sup>18.8.7</sup>)

-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지분 보유한도 확대  
현행 4% → 34%



개인정보 규제 혁신  
(<sup>18.8.31</sup>)

-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, 가명정보 이용범위 확대 등



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마련  
(<sup>18.9.27</sup>)

- 해외여행 국민불편 해소 및 여행수지 개선을 위해  
입국장 면세점 도입



데이터 3법 통과  
(<sup>20.1.9</sup>)

-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  
가명처리후 개인정보 활용

## | 주요 사례 : ② 미흡 사례



###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법적근거 미흡

\* 대안으로 “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” 제공



### 유전자 가위 치료 범위를 법령으로 제한

\* 생명윤리법 제47조



### 원격화상 투약기 도입 논란

\* 안전성 논란, 관련업계 반발



## | 주요 사례 : ① 시장진입 제한 규제

### ● 사물 위치정보 수집 · 소유자 사전 동의

\* 위치정보법 개정



### ● 금융분야 높은 진입장벽

\* 과도한 자본금 요구 등



## | 주요 사례 : ② 견고한 칸막이 규제

- P2P 관련 근거 법률 부재,  
대부업 등 우회 영업



- 새로운 금융상품 수용 불가

\*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2년 소요  
(자본시장법 개정)



## 7 여전히 먼 가야할 길 : 불합리한 신산업 규제

### 주요 사례 : ③ 미흡한 갈등조정 시스템

- 차량공유서비스업 (Uber)
- 타다 vs. 자동차운수사업법



- 공유숙박업 (Airbnb)



조직화된 소수의 이익 > 국민 전체의 이익 ⇒ “갈등조정시스템”



## 7 4차산업혁명의 쓰나미 : 위기? 또는 기회?



신산업. 신기술과 갈등, 그리고 “갈등조정시스템” 제도와 문화

### Ⅲ · 맺는 말 : 규제혁신, 이제 공유와 확산입니다



- 시장진입·영업규제 혁신방안 (‘18.10.18)
- 창업 규제 혁신방안 (‘18.10.24)
-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성과 (‘18.10.31)
-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(‘18.11.8)
-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(‘18.11.15)
- 총리 주재 제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(‘18.11.21)



- 지역경제 맞춤형 규제혁신 (12월)
- ‘18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실적(12월)



#### » 후속조치 적극 추진

#####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법령 전수조사

- 정부내 규제(인허가 등) 포함 법령 1,500여개 전수조사
- 한정적·열거적 규정 발굴 및 부처 협의·조정



##### 규제샌드박스법 통과

-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(∼‘18.12)
- 업계 릴레이 현장설명회 (‘18.10~12)
- 전용 홈페이지 구축 (‘18.12)
- 가이드북 제작·배포(‘18.12)

#####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확산

- 수소·전기차, 에너지신산업, 드론 등 타 신산업 분야 로드맵 구축
-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‘19년 10.17일 발표

### Ⅲ 맺는 말 : 신산업 우선허용체제의 핵심메시지

#### 1. 사고의 전환: “이제 시장을 믿고 자율에 맡기자”

⇒ 이제 공유와 확산입니다!

#####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와 시장의 역할 변화

- 국가주도 성장 → 시장주도 성장 (혁신기업&민간지원)
- 시장통제적 사고 → 시장자율 확대↑, 책임성은 강화↑

#### 2. 규제의 악순환 : 낮은 사회적 자본

- 저신뢰 사회 ⇒ 규제 강화↑ ⇒ 정부·국민·기업 제약⇒사회적 비용↑

#### 3.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회복과 혁신 필요

- ① 정부혁신 (행정문화, 거버넌스 혁신)
- ② 시장혁신 (자율성에 상응한 책임성 강화 ⇒ 사후규제시스템)
- ③ 사회혁신 : 변화에 대한 사회 공감대 확산      사회의식 변화 필요





**감사합니다**